

“여성 할례는 박해”...난민 인정 요건 맞다

광주고법, 부당한 전통 위협받는 시에라리온 여성 신청 받아들여 임신 상태로 광주 들어와 폐지 주으며 생활하다 이주민센터 전전 파키스탄 가족 인정 이어 두번째 판결...법원 판단 변화 주목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국적의 A(여·39)씨는 여성 할례, 전통 종교단체 가입을 강요하는 어머니와 단체 사람들의 살해 협박을 피해 지난 2019년 임신한 상태로 본국에서 도망쳐 광주지법에 난민 신청을 했었다.

할례는 여성의 성기 일부를 잘라내는 의식으로, A씨가 사는 시에라리온은 세계에서 여성 할례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다.

1심은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여성 할례는 ‘박해’에 해당하고 여성 할례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난민 지위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 1부(수석부장판사 최인규)는 A씨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 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뒤집어 원고 승소 판결했다.”

대법원도 지난 2017년 처음으로 여성 할례를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어, 광주고법은 이같은 대법원 판결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항소심 재판부는 시에라리온에 있는 A씨 어머니와 이모가 A씨의 ‘할례’를 요구하는 단체에 반드시 가입시켰다는 방송 인터뷰 영상, 시에라리온 공화국 15~49세 여성의 86.1% 및 89.6%가 여성 할례를 겪었다는 유니세프·유엔인구기금 보고서, A

씨 어머니가 여성 할례를 수행하는 시에라리온 내 전통 종교단체의 특정 지역 지도자로 A씨에게 단체 가입을 강요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본국으로 송환될 경우 충분한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의 항소심 변호를 맡은 김민지 변호사는 “항소심 결정이 나왔지만 대법원 상고 가능성도 남아 있어 조심스럽지만, A씨가 난민으로 인정받고 시에라리온 국적인 아이에게도 난민 지위가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이 같은 가족적·지역적·사회적 상황에 관한 위험이 인정된 것으로 보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올 들어서만 방정부시위 전력으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것으로 우려되는 파키스탄 출신 가족들의 난민 지위를 인정할 데 이어 두번째 난민 인정 판결이라는 점에서 법원의 난민 판단 기준이 적극적으로 바뀐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법무부가 집계한 난민 인정자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난민 인정률은 0.8%로, 난민 신청을 한 6684명의 외국인 중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55명에 불과하다.

지난 1994년부터 지난해까지 난민으로 인정받은 경우는 799명에 그쳤다.

A씨는 지난 2019년 9월 4일, 한국에 들어와 광주에 자리를 잡았을 당시 임신중이었다. 출산 전에는 인력사무소에 나가 일해 일주일에 1~2회에 걸쳐



임시관리번호 발급받는 미등록 외국인

23일 오전 광주시 광산구 하남산업단지 혁신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을 희망하는 미등록 외국인들이 임시관리번호를 받기 위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최현배 기자choi@kwangju.co.kr

일당 6만 6000원을 받아 생계를 꾸려 나갔다. 흑인에 여성인 탓에 A씨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고 한다.

지난해 5월 아기가 태어나자 더 이상 일하기도 어려웠다. 아기를 업고 동네 재활용품이나 종이를 수거해 약간의 수입을 얻었지만 분유와 기저귀를 구입하기도 힘들었다.

A씨는 부족한 생활비를 메꾸기 위해 이주민을 돕는 각종 단체를 옮겨다니며 쌀과 아기의 기저귀를 지원 받았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어려운 사정을 접한 천주교 비아동 교회의 빈첸시오회 박순교(에스텔) 회장과 빛고을광명교회 박익사 목사 도움을 받았다. 3개월간(2020년 9~11월)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새벽 6시에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코로나로 다시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됐고 월세(29만원)가 밀려 집에서도 쫓겨날 처지에 놓였다.

A씨는 아이의 교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는 소식에 난민 신청을 했고 결국 올해 광주고법에서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다.

이주민종합지원센터 정기원 팀장은 “1년간 A씨를 도우면서 아프리카에서 행해지는 ‘여성할례’가 얼마나 많은 어린 여자아이들을 죽음으로 내몰았는지 알게됐다”면서 “죽음의 위기와 가족과의 이별이라는 어려움을 겪으면서 타지에서 생계를 꾸려가는 A씨와 아기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납품업체 선정되려면 공무원에 금품 제공 만연”

판결문 속 드러난 도교육청 ‘상납’ 관행

납품대가 10~20% 지급 관례 업체 “관리 할 수 밖에 없어”

전남도교육청의 업자와 관료 사이의 고질적인 ‘납품’ 비리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교육청 직원과 알선 브로커의 뇌물 수수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도교육청은 줄곧 “정령 교육 행정”을 표방해왔지만 재판에서 드러난 실상은 달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 1부(부장판사 임혜원)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징역 5년, 벌금 1억원, 추징금 4100만 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전남도교육청 공무원 A씨의 경우 납품 업체 입장에서는 ‘관리’할 수 밖에 없는 직원이었다.

판결문으로 보면 A씨가 사·군 교육지원청 예산 요구 자료를 받아 교육환경개선사업에 필요한 예

산을 편성하는 역할을 맡은 부서의 직원이라는 점에서 납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컸음을 짐작할 수 있다. A씨보다 앞서 같은 업무를 맡았던 직원도 납품 대가 명목으로 1000만원이 넘는 뇌물을 받았다가 구속됐다. 1심 판결문에는 ‘납품 대가로 10~20%를 (뇌물로) 지급하는 게 업계의 관례’라는 업체 관계자의 진술도 적시됐다.

알선브로커 B씨도 업계의 이같은 점을 알고 공무원들과의 친분관계를 유지해왔다. A씨와는 골프모임 등을 함께 하며 친한 관계를 유지했다. 특히 A씨 외에도 기자재 구입 여부나 예산 집행 등을 관장하는 특정 교육공무원들과의 관계는 치밀하게 관리해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이렇다보니 B씨가 납품 업체, 대상 학교 및 물품까지 지정한다는 소문이 파다하게 퍼졌다는 내용까지 판결문에 나타났다.

B씨는 도교육청 공무원들과 해외여행, 제주도 여행을 다녀오는가 하면, 주기적 사적 모임을 만들고 골프, 식사 모임을 가졌다. 자신의 회사 법인가 드로 여행 경비 등을 선결제하거나 회사 명의 리조

트 회원권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 B씨는 제품 납품을 가능하게 영업을 한 대가로 납품가액의 45%까지 받아 챙겼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학교에 기자재를 납품하는 업자들 사이에서는 납품 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교육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게 만연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전남지역 업체도 아니고 제품도 품질·가격경쟁력 면에서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짧은 시간 안에 전남지역 학교에 대규모 납품이 이뤄질 수 있었던 데는 B씨가 평소 치밀하게 관리해온 전남지역 교육공무원들과의 인맥 및 친분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지적했다.

법조계에서는 재판부가 전남도교육청 관련 부서의 고질적 금품 상납 관행을 분명하게 지적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한편, 재판부는 뇌물공여,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를 기소된 B씨에게 징역 4년, 추징금 5억 9000만 원을 선고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검찰, 살인범죄 형량 범위내 최고형 구형 방침

대검찰청, 엄정 대처 지시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살인 범죄에 엄정한 대처를 지시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살인 범죄에 형량 범위 내 최고형을 구형하고 항소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김·경간 긴밀한 협력으로 수사 효율성을 높이고 강력 검사를 주축으로 한 전담 수사체계로 범행 동기와 공범 관계 등도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해외로 도피한 살인 피의자들은 국제형사 사법 공조 등을 통해 추적하는 등 검찰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처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대검 지시는 제주 변호사 살인·한강 도막 살인사건 등으로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살인죄는 2015년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시효가 폐지되고 처벌이 강화됐지만 매년 500~600명이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되고 있다.

/연합뉴스

무등산서 신원 미상 유골 발견

무등산의 한 계곡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유골이 발견됐다.

23일 광주동부경찰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3시10분께 광주시 동구 윤림동 무등산국립공원 내 한 계곡에서 신원 미상의 유골이 등산객에 의해 발견돼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여름철 집중호우로 무너진 토사와 함께 휩쓸려 내려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타살 등 범죄 연루 가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1차 부검의 검사 결과 수 년전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유전자정보(DNA) 분석결과 가 나오면 실종·미귀가 신고 내역 등과 대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오피스텔, 신축부지

타 용도 변경 가능, 회사 사정상 급매

- ▶ **대인동 롯데백화점 옆** ▶ **신안동 엄마요양병원 옆**
- 대지 515㎡(구 156형) 대지 582㎡(구 176형)
- 지하 1층, 지상 9층 지하 1층, 지상 10층
- 46㎡(구 14형), 64호실 49㎡(구 15형), 72호실
- 매매 - 18억5천만원 매매 - 21억원

중개환영. 010-3605-5000

근린상가, 월세 660만원

- ▶ **광양시 중동 해비치 호텔 옆**
- ▶ 6층 건물 中 4층 전체
- ▶ 분양평수 240평, 전용 147평
- ▶ **현재, 메리츠화재 임대 中**
- ▶ 매매 - 14억(대출 9억 포함)

중개환영. 010-3605-5000